

<미디어오늘>

조선·동아, 10대 청소년 '좌파 딱지'

[비평]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두고 '미성숙 청소년' 운운

2010년 07월 02일 (금) 10:40:16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미국산 쇠고기로 촉발된 2008년 5~6월 촛불정국 당시 조선일보노동조합은 자사 지면에 대해 반성했다.

당시 자사 기자 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된 조선일보 지면은?'이란 질문에 '못한 편이다'란 답이 25.6%, '매우 못했다'는 14.5%였다.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보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재미삼아 집회에 참가한다'는 의견은 24.1%나 됐다.

그해 5월만 해도 광우병 논란을 인터넷 괴담으로, 촛불문화제 참가 시민을 반미좌파세력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6월 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와 사실을 실었다. 독자 조사에서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과 항의가 높아 지면의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朝鮮日報

2010년 07월 02일
31면 (오프니언)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

전교조 지역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오는 7일 발족하는 이 모임은 참여 제안서에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6개 지역에 민주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망이 밝아졌다"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수진영이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이라며 "학생 인권을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안(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의 자유,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학생 신분에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게다가 이번 제안서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의 것도 아니다. 제안서는 2008년 촛불시위에 나왔던 10대 청소년

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을 '정치적 주체'로 키우자고 하고 있다.

초·중·고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배우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을 하기 쉽다. 2년 전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처음 일어났을 때 참가자의 80% 이상이 중·고생이었다. 이들은 병든 소가 주저앉고 고구리지는 PD수첩의 선정적 장면과 분유·치즈·라면을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인터넷 괴소문에 이끌려 "이제 열다섯살인데 벌써 죽기는 싫어요"라며 청계천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10대들은 이번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오폭실·좌초실·내부파괴설 같은 인터넷 유언비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또다른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렸다.

인터넷 선동과 유언비어에 휩쓸리기 쉬운 10대를 '정치 주체'로 키우려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은 정치꾼,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이 외부 세력 조종을 받아 '평준화 확대하라' '등록금 없애라' '특목고 폐지하라'며 집단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18.9×9.8)cm

▲ 조선일보 7월2일자 사설.

동아일보노동조합도 그해 6월 낸 노보에서 “동아일보는 과연 맑은 창인가. 신뢰받는 신문인가”(입사 11년차 기자)라는 질문을 던졌다. “17대 대선과 광우병 소 논란을 거치며 이런 불안과 우려는 더 커져 가는데 우리 내부는 침묵과 냉소, 피로만 가득하다”라는 토로였다.

입사 15년차라고 밝힌 한 기자는 “동아일보는 권력의 옳고 그름을 꼬치꼬치 가려줘야 한다. 정치권력과 한 배를 탄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문명 논설위원은 “현재 바깥 여론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너무 ‘친정부적’이라는 데 있다”며 “다시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정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고언했다.

東亞日報

2010년 07월 02일
35면 (오피니언)

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條例)’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가 발족한다. 친전교조 세력은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고, 시도 의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당선자가 대거 나온 데 고무돼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했다가 도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보류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개연성이 높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초안에는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집회결사의 자유 및 교육 정책 참여권 허용, 정규교과 외(外) 학습 선택권이 들어 있었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드시 비교육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교생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만 해도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다. 학생들

에게 교복 대신 사복을 입게 하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는 좌파 세력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나 학교 운영 참여권, 정규 교과 외 학습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은 훨씬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최근 서울운동본부 참여제안서에서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전받고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시민으로,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에는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 청소년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를 이렇게 미화할 일인가. 교육계 전체가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친전교조 세력이 학생 인권의 대변자인 양 행동하는 데는 기존 교육현장의 책임도 크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실력 열정 도덕심을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17.0×10.1)cm

▲ 동아일보 7월2일자 사설.

이랬던 조선-동아일보였지만, 당시 촛불을 거론하는 지금의 지면에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동아일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과 관련한 2일자 사설에서 2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게다가 이들은 10대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자발적인 의식과 행동의 주체로서가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다. 동아는 <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에서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 청소년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라고 했고, 조선은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에서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는 것이다.

‘외부 세력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것은 1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식이 덜 깨인 성인은 충분히 그래왔고, 현명한 10대는 그렇지 않았음을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0대를 위한 다며 짐짓 우려할 시간에 2년 전 보도를 ‘반성의 재료’로 삼는 게 신문들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반성한 일은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설보다 10대에게 교육적인 일이기도 하다.

<뉴데일리> 칼럼

이계성 (반국가교육적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편집 : 10.07.13 11:36

'학생인권조례' 왜 만드나

인권조례는 초중고생을 '홍위병'으로 양성하겠다는 선언
학부모들이 나서서 인권조례를 막아 어린 영혼을 지켜야
전교조에 없는 단체 행동권을 아이들 앞세워 대신 하겠다는 것

곽노현 교육감은 6월3일 당선 소감에서 혁신학교 300곳 개설, 학생인권조례제정,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초중학교 공교육비완전 무상화와 강남북교 교육격차해소, 특권교육 타파를 내세웠다.

곽노현은 경기도 김상곤교육감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이 되어 2009년 12월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했다. 조례안 초안은 ▶체벌과 집단 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 실현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 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의 학칙도 개정토록 했다.

곽노현이 주관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구상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학생 인권조례가 아닌 학생 훈육조례를 만들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촛불 홍위병' 키우겠다는 곽노현교육감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7월 달 안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판 뒤, 8월 달 부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내에 조례 초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례에 학생이 교내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결사권을 포함시켜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자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이 모임은 참여 제안서에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6개 지역에 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망이 밝아졌다"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수진영이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이라며 "학생 인권은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해야 한다며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했다. 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목적이 학생들에게 촛불을 들러 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만들자는 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아 아니라 친북좌익혁명의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이 전교조 선동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촛불시위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2년 전 광우병 촛불폭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 참가자의 80% 이상이 중·고생이었다.

이들은 병든 소가 주저앉고 고꾸라지는 PD수첩의 선정적 장면과 분유·치즈·라면을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인터넷 괴소문에 이끌려 "이제 열다섯살인데 벌써 죽기는 싫어요"라며 서울광장으로 몰려나왔다. 10대들은 이번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오복설·좌초설·내부파 괴설 같은 인터넷 유언비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또 다른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렸다. 전교조와 친북좌익들은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부자 집 아이와 가난 집 아이가 겪을 위화감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학업성취도평가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인권조례 만들어 복장 두발 자율화 하다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부유층아이 앞에서 가난한집 아이이가 겪게 될 위화감과 소외감은 어떻게 해소해줄 것인가 묻고 싶다. 좌익들은 온갖 언어혼란 전술로 국민을 속이고 친북좌익혁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다.

전교조와 친북좌익들은 광우병촛불시위에 초중고생을 동원하지 못하여 이명박정부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있다. 초중고생을 불법폭력시위에 끌어내지 못한 것은 시험 때문이라고 보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운동과 함께 인권조례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방과 후 단체 활동을 허용하여 학생들을 거리집회에 내몰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친북좌익들의 '홍위병'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할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담긴 내용 곽 교육감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율을 하겠지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기초로 학생 '집회·결사 자유'와 '사상의 자유'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교는 학

생들의 교내 집회나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지참을 금지할 수도 없게 된다. 학생들은 대체로 반기지만, 학부모·교사들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 학생도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장 등에게 의견을 표출하고 싶으면 수업 시간을 제외하곤 언제 어디서나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교조 선동에 아이들이 사학분규와 학교장을 전교조의 노리개로 만드는데 앞장세우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 후 공약이행 보고서에서 "두발 길이 규제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학교가 '머리 길이는 귀밑 10cm 이하' 같은 규칙을 두고 단속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대신 엄색·파마와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학생들은 크게 반기지만, 학부모·교사들은 반대한다. 반대 이유는 공부에 쏟아야 할 신경을 다른 데 허비할 게 뻔하고 탈선을 조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의 3대 교육개혁안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에게 친북좌익사상을 세뇌시켜 좌익혁명에 흥위병으로 이용하겠다는 전략 전술로 보인다.

곽교육감은 취임 후 첫 직원 조회에서 “서울 교육은 부끄럽게도 기초학력·청렴도·무상급식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렴도와 교육복지는 1등,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꼴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의 교육정책 속에는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문제 해결은 들어 있지 않다. 기초학력이 최하위라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요구를 외면하고 복장 자율화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여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학생들에게 교내와 학교 밖에서 각종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아이들을 친북좌익혁명 '흥위병'으로 양성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데, 초중고를 촛불시위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을 믿을 수 없으니 학부모들이 나서서 어린 영혼을 지켜내야 한다. 전교조에게는 노동 3권중에서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단체행동에 전교조 대역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전교조가 선동하여 친북좌익혁명에 합법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감 제1책무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서울 강남 학원장에게 ‘학원가에서는 어떤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학원가는 원래 진보 성향 후보를 지지한다. 2007년 선거 때도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은 학력 경쟁을 지양하기 때문에 학원에 불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켜야 학원이 더 잘 된다”는 답변이었다. 학원이 가장 꺼리는 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자기네 학원을 찾지 않는 것이다. 곽교육감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를 무상급식에 쏟아 붓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주면 살판 난 곳은 학원이다.

탈무드는 ‘학교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우리 현실에서는 학원 없는 곳에는 학생이 살지 못하고 떠난다. 집값도 학교가 아닌 학원이 좌우한 지 오래다. 학원은 “진보 교육감이 학교를 더욱 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가 공교육을 붕괴시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육풍토가 만들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던 시대는 가고 아버지 재력과 어머니 정보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이 학원천국을 만들었고 학원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부자와 서민들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양극화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만들어 놓고 친북좌익혁명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감의 제1의 책무는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경쟁력이 필수고 교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와 학생들 성적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광교육감은 취임식에 학생을 동원해서 ‘인권조례’ ‘무상교육 주장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교원평가’를 반대하도록 선동했다.

2009년 수능자료에 나타난 응시자의 평균 표준점수는 산출해 보니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서울은 11위, 경기도는 12위, 인천은 15위였다. 경기도는 평균 표준점수 합계가 290.6점, 인천은 합계 점수 289점이었다. 서울은 292.2점으로 1위 광주 313.6점 보다 21.4점이나 낮았다. 전국 1위인 사교육 1번지 수도권의 학력 침체는 충격적이다. 전교조와 친북좌익들이 주장해온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은 계층간 지역간 격차만 심화시켰다.

광 교육감은 인권조례 만들어 죽어가는 서울 교육 숨통마저 조이려 하고 있다. 광교육감은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던 격언을 자식을 낳으면 시골로 보내라는 격언으로 바꾸게 만들고 있다. 광교육감이 친북좌익혁명교육 위해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일어설 때가 되었다. 34% 얻어 당선된 광교육감이 정신을 못 차리고 허튼 짓을 계속한다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퇴출운동을 벌여야 한다.

<데일리안>

학생인권조례, 우리 아이들 망칠 셈인가

<기고>스승과 제자 사이를 협상과 흥정의 대상으로 몰아가기

교실은 붕괴 가속화, 교사는 무사안일 심화, 학생은 무소불위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2010.07.19 00:10:45)지금 학교현장에 교육은 없고 포퓰리즘이 활개 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좌파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보면, 두발 복장 자유, 긴 머리에 빨강 파랑 노랑 염색도 자유,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도 자유, 체벌 금지,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 서약서·반성문 작성 금지,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학생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특히 두발·복장 자유에 83%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고,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교 선생님들의 반응이 이러한데 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밀어붙일 기세다. 우리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 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주최한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3대 교육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째, 좌파 교육감들의 머릿속에는 정치만 있지 교육이란 개념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인 자유와 평등 원리와 교육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규제와 억압,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둘째, 좌파 교육감들은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들이 미성년자로서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학생들을 이념 편향 교육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치적 동반자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셋째, 교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조례와 균형을 잡겠다는 발상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의 가해자는 교사이고 피해자는 학생이다. 그러면 교권조례의 가해자는 학생이고 피해자는 교사가 된다. 말하자면 사제간 갈등을 법과 재판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는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넷째, 아수나로라고 하는 중고교생이 중심이 된 소위 학생인권단체 대표가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하여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 등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는 학생의 위치와 본분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학생회, 어린이회는 학교에서의 단체 활동을 통해 장래 민주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이지 학생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구는 아니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고 교사의 무사안일 풍토가 심화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학교 교사의 매는 폭력이고 학원 강사의 매는 사랑이라고 빈정대며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겠는가.

광노현 교육감은 암행어사로 조용히 학교에 잠입하여 실태를 파악해보라. 가정의 제왕인 이 시대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사들은 울고 싶다고 한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전쟁을 하고 나왔다고 한숨짓는다. 쌍스런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아이들을 못 본 체하고,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는 선생님, 여학생 화장실에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도 그냥 지나간다. 이런 아이를 찾아내 생활지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한다.

오늘의 교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때로는 학생에게 엄격한 자기 억제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인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글/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조선일보>

전국 학교장 91% "체벌 전면금지 반대"

-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0.08.06 02:58

본지, 교총과 804명 조사... "대체 프로그램 효과 없을것"

학생인권조례·무상급식도 각각 88%·74%가 반대의사 "학교 현장의 실정 반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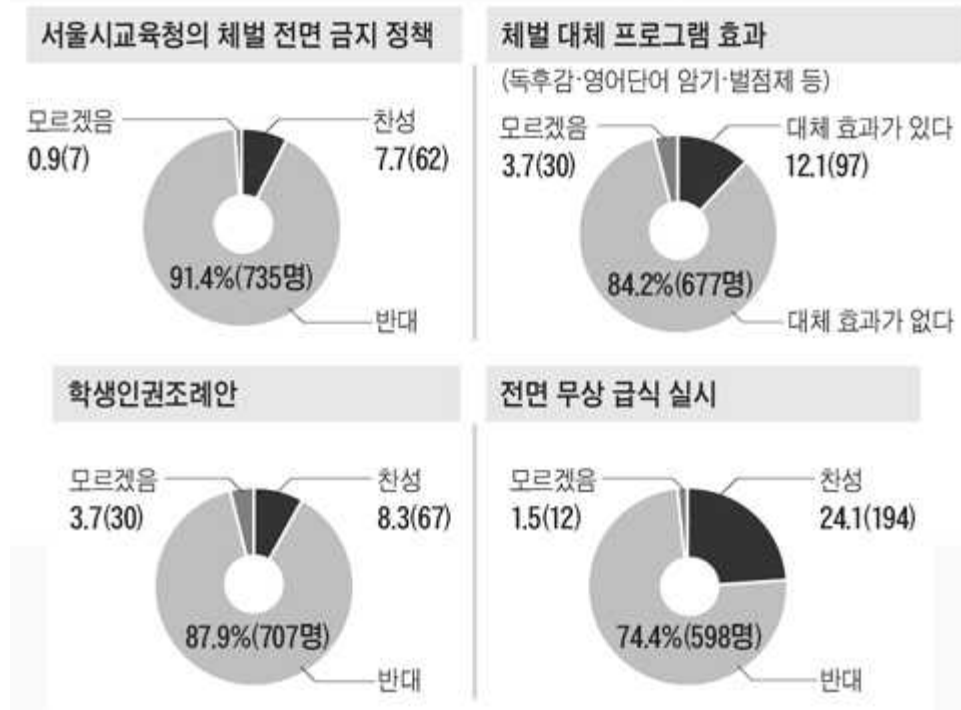
다수의 학교장들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한국교총에 의뢰해 전국 학교장 8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발표한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91.4%에 이르는 735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전면 무상 급식 실시'에 대해서도 각각 87.9%(707명), 74.4%(598명)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달 1일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취임한 이후 전국 교장들을 상대로 교육 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 대상은 초등학교 교장이 63.4%(510명), 중등 21.9%(176명), 고교 14.7%(118명)였고, 지역별로는 경기 14.7%(118명), 서울 10.7%(86명), 전남 9.2%(74명) 순으로 많았다.

교육 현안에 대한 전국 교장들 설문 조사 결과 단위: %(명)

※한국교총이 7월 26일~8월 5일까지 전국 학교장 804명 설문 조사



◆학생인권조례 등 대다수 반대

학교장들의 반대가 가장 큰 부분은 광노현 교육감이 최근 발표한 '체벌 전면 금지' 정책이었다. 응답자의 91.4%가 반대했다. 서울 지역(86명)도 91.8%가 반대했다.

체벌 전면 금지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개발 중인 각종 대체 프로그램(독후감 쓰기·영어 단어 암기·반성문 쓰기·별점제 등)에 대해서도 84.2%(677명)가 '체벌 대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체벌 전면 금지 후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학생 정학·퇴학 제도' 39.4%(317명), '학부모 소환제' 34.2%(275명), '상담 교사와 사회복지사 배치' 14.9%(120명)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의 한 교장은 "체벌 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효과적인 대체 프로그램 마련도 없이 2학기부터 제도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발 자유나 체벌 금지를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 역시 87.9%가 반대했다.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90.6%로 압도적이었다.

'전면 무상 급식'에 대해서도 74.4%가 반대했다. 무상 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서울·강원·전북·경기·전남 등 진보 교육감들 지역에서도 70.1%가 반대했다. 대신 '저소득층 자녀에 국한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이 50.5%(406명), '추가 재원을 확보한 후 다른 교육 예산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70명) 나왔다.

올해 처음 전국 학교에서 실시된 '교원 평가'에 대해서도 95.4%(767명)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정책 추진해야"

앞으로 교육감들의 행보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점으로는 56.7%(456명)가 '학교 현장의 실정·여론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김모 교장은 "직선 교육감들은 교육 현장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표를 의식해 '무상 급식' 같은 비(非)본질적인 부분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교장들의 역할·위상 변화에 대해선 60.4%(486명)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서울시 이모 교장은 "진보 교육감들이 각종 정책들을 급작스럽게 추진해 교사·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요즘엔 교육의 수장(교육감·교육부 장관)이 없으면 학교 구성원들끼리 더 잘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설문 실시 기관이 교총이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 정책에 반(反)하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교장들이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교육감은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학교장이 자긍심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고]학생인권조례, 시기상조다/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을 빚고 있다. ‘교원 76%가 반대’, ‘학생인권조례 갈등 본격화’ 따위 기사 등이 그것이다. 조례안은 대략 체벌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 휴대전화소지·집회의 자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조례안은 시대착오적이면서 매우 혁신 내지 진보적(체벌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이기도 하다. 또 조례안대로만 되면 입시지옥이 해소될 만큼 획기적(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이기도 하다.

우선 획기적이라 할 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강제적 보충수업은 극소수 학생들의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들러리이거나 면학분위기용 내지 교사 부수입 제공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무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칭 일류대 진학자를 뺀 나머지 대다수 학생은 원서만 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런 대학입시를 위해 전체 학생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공부하는 기계’로 고교시절을 보내야 하는 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금지, 두발·복장의 자유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심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학교가 무너졌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김대중정부가 선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였다. 가령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금지를 조례에 넣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시 그런 빌미가 제공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바람이다.

아다시피 경제적 수준 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자유보다 방종이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했던 실패한 정책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던 말인가.

두발·복장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학생들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고교처럼 학생들이 사복차림으로 머리를 기르고 교내에서 키스 정도는 ‘가볍게’ 할 만큼 우리 사회는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

솔직히 교수·학습 이외 생활지도로 많은 시간 할애와 함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사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편해지니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거나 너무 앞서간다고 말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학생들에게 그럴만한 자정 능력이 아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히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다. 학생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능시험 부정사건 이후 전국 각급 학교로 확산된 교내시험 2인 감독 제도부터 없애야 맞다. 극히 일부 때문에 전국의 대다수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심각한 인권침해가 또 어디 있겠는가.

급진적인 조례안 제정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대안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미 시행 중인 ‘체벌 3수칙’ 같은 지침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위로 머리 자르기 따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장과 해당 교사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 병행도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2010-07-26 30

[기고/김진성]포폴리즘 인권조례, 교실이 무너진다

기사입력 2010-08-10 03:00 | 기사수정 2010-08-10 03:00

학교현장에 교육은 없고 포폴리즘이 활개 친다.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교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인권조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92.3%는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는 의도가 의심된다.

첫째, 진보 교육감의 머릿속에는 정치만 있지 교육이란 개념이 없다. 학생 인권조례의 배경인 자유와 평등 원리와 교육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하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평등하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둘째, 진보 교육감은 학생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만 알지, 그들이 미성년자로서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셋째, 교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조례와 균형을 잡겠다는 발상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의 가해자는 교사이고 피해자는 학생이다. 교권조례의 가해자는 학생이고 피해자는 교사가 된다. 말하자면 사제 간 갈등을 법과 재판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넷째, 이수나로라고 하는 중고교생이 중심이 된 소위 학생인권단체 대표가 꼭 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하여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등을 반대했다고 한다. 학생의 위치와 본분에서 크게 벗어났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고 교사의 무사안일 풍토가 심화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때로는 학생에게 엄격한 자기 억제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안양옥 교총회장, “내 제자도 교총 가 입 안 해”

[교육희망] 안양옥 회장, 교사 연수장에서 교총 가 입 강요 등 논란

임정훈 기자 2010.08.12 11:16



▲ 연수자료집 표지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 연수장에서 교사들에게 교총 가입을 강요하고 진보교육감에게 저항하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 대한체육회 주최로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진행된 전국초등교원 체육연수에서 비롯됐다.

연수 첫날인 4일 첫 강의를 맡은 안양옥 회장은 강의 주제('한국 체육의 지향과 초등 체육의 역할')와 상관없는 "나는 운동을 잘 한다. 다른 교수들과 내기해도 안 진다"는 등의 신변잡기적 이야기와, "젊은 교사들이 교총에 가입을 안 해 힘이 모자란다. 교총에 가입해 달라"며 사실상 가입을 강요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진보교육감의 말을 다 따를 것 없다. 저항하라. 내가 앞장서고 있으니 박수 한 번 쳐 달라"며 박수를 유도하는 등 연수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 참가했던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안양옥 회장은 "교총 회원 손 들어보라"고 하면서 단상 아래로 내려가 앉아있는 교사에게 "교총에 가입했느냐"며 직접 묻기도 하고, "아주 창의적인 친구네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내 제자인데도 (교총에) 가입을 안 했다"며 현직 교사인 ㄱ씨의 실명까지 거론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이 제자라며 실명을 거론했던 교사는 다양한 수업활동과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초등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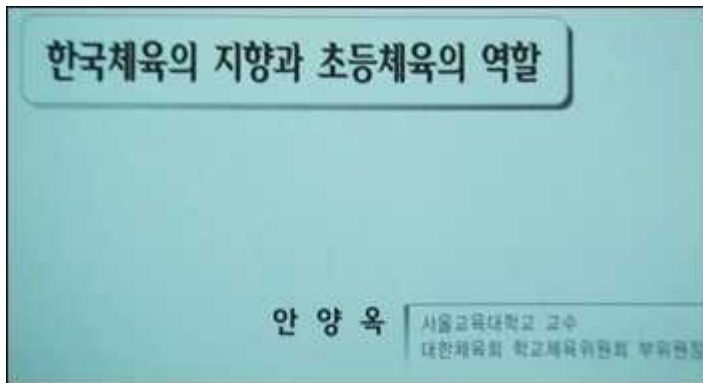
또 수행원에게 "가입원서를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며 "원서를 돌릴 테니 가입 좀 해 달라"고 했다가 "교총 연수장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일부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중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양옥 회장은 이 같은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의욕이 앞서 그랬다. 실수다. 인정한다"고 10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에게 저항하라고 한 적은 결코 없으며 제자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학교에서 교수학습활동에 문제가 된다면 조례 자체가 선언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얘기는 했다. 진보교육감이랑 얼마나 친한데 그런(저항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겠냐"며 자신의 말이 확대돼서 전달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회원 가입 강요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교사의 지적을 받고 내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공개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수에 참가했던 교사들은 “안 회장이 제자라면서 ㅈ교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교사들에 따르면 “안 회장이 자신의 조카도 교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후 이어 ㅈ교사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안 회장과 교사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 안양옥 교총회장이 강의하기로 했던 내용의 제목 또한 안 회장이 강의를 마치고 나가면서 한국교총 회원 가입 강요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너무 열 받지 마”라며 반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교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참 어이가 없고 좀 더 강하게 항의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문제 제기한 교사가) 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등을 두드리며 화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기억할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한편 안 회장은 이날 연수에 “한국교총 회장 자격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회장으로 당선하기 전인 지난 4월에 이미 강의를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연수자료집에도 ‘서울교대 교수’로 표기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한국교총 회장이라고 소개하고 회원 가입 강요 논란 등을 일으킨 데 대해 “강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 건 인정한다. 주의하겠다”면서 파장을 의식한 듯 “(교사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는데 기자한테까지 내용이 전해질 줄은 몰랐다. 너무 과도하게 이슈화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다.

강원교육청 전국 첫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교복 자율화 담은 규정 2학기부터

[2010.08.11 21:45]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2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한다.

강원교육청은 또 교복착용 여부도 자율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에 맞게 외모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강원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 금지와 두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교복은 학교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생이 교복 착용을 원치 않을 경우 교복에 준하는 복장을 입도록 했다.

예술고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염색이나 화장을 허용하는 문제까지 논의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집회권 보장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선 학교들은 오는 19일 발표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부터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강원교육청은 시행 초기인 만큼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관경고 등의 물리적 제재 대신 장학사를 파견해 새로운 규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체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구성원들이 향후 시행될 조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체벌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대화를 통해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두발 자율화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까까머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해소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내년 4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지역 학생들도 두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두발자율화를 놓고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잇따르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을 정하도록 ‘학생 두발 지도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아 그동안 두발 자유를 허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체벌 금지,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을 담은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

경기교육청 체벌대체 매뉴얼 보급 등 학생인권 대책 '밈그림'

 기사입력 2010-08-05 08:22 | 최종수정 2010-08-05 11:00

【수원=뉴스1】 유명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등 체벌 대체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5일 ▲교내 인권 존중 향상 ▲책임있는 학생문화 조성 ▲체벌 대체 프로그램 표준안 보급 ▲인권 침해 신고 시스템 구축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등을 학생 인권 존중 종합대책 5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달 19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강도높은 방안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 계획에는 우선 체벌을 전면 금지하되 독후감, 봉사활동, 과제물 부과 등의 지적벌(智德罰)제도와 그린마일리지 등 대체 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고없는 소지품 검사와 강제적 두발 단속, 언어 폭력, 학교 폭력 등의 금지, 교문 앞 생활지도(일명 선도부) 폐지,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 등의 교내 인권 향상 대책도 포함된다.

또 25개 각 지역교육청에 생활지도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본청에는 (가칭)'생활인권지원단'을 만들어 중대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직접 장학지도에 나서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획도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교사에 대한 폭언, 폭력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학생 문화 조성 방안도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8월 중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초안을 김 교육감에게 보고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 실·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된 뒤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 금지 등이 담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학생 인권 대책을 중점 추진해 왔지만 1년이 흐른 지금도 일부 교원들의 인권 의식 부재와 결핍이 계속돼 안타깝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ujin@newsis.com

교칙을 학생과 함께 만들어보자 [2010.08.06 제822호]

[기고]

체벌을 없애려면 잘못을 제재할 다른 제도적 장치 필요...
집단 규범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야 책임감도 생겨



» 학생들이 교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 책임감도 생긴다. 교칙
하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대부분의 아이는 수업을 잘하고 유머가 있고 친절하면서도 아이들을 ‘딱 잡을 수 있는 교사’
를 원한다. 1980년대에는 별로 인기 없던 그 ‘딱 잡을 수 있는 교사’를 2010년 아이들은 왜
원하게 된 것일까. 쉬는 시간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괴롭힘을 일삼
는 학생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 정학·퇴학 없애자 교사들 곤혹

요즘 학생들은 교사가 무조건 관대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공정할 것을

요구한다. 규칙을 어긴 아이, 그리고 그 규칙을 어겨서 받는 벌청소를 빼먹고 도망간 친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급우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포함해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규범을 위반한 경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교실은 혼란 상태가 된다. 그래서 교사는 옳고 그름의 심판자이자 정의의 위한 벌의 집행자이기도 하다. 발생 가능한 모든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책임이 교사의 어깨 위에 있고, 과거와 달리 실오라기만 남은 교사의 권위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 한편으로 학생은 자신의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에 대해 과도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 스타일을 중시하는 요즘 학생에게 검은색 실내화 주머니를 들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가깝다. 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고,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교사나 다른 학생의 자의적 폭력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전자의 자유를 위한 것이지만 후자의 자유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

은 사회가 하나의 병영 같았던 과거 1970~80년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교육적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교사들의 자의적 폭력에 대한 크고 작은 악몽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참 많다. 그것이 학창 시절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억은 평생을 가는 상처가 된다. 오늘날도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과도한 체벌로 인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체벌 금지를 담은 인권조례가 해결하려는 학교 안 인권침해의 전통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학교 안 인권침해는 학생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거친 소수의 학생이 일으키는 다른 학생에 대한 폭행·갈취 등의 문제가 이전보다 많아졌고,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인권침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이 밥맛이 없다고 학교 식당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정학이나 퇴학 조치라는 것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계속 안고 있어야 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격리 효과가 있는 전학 조치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강제할 수 없다. 다른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어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교실에서 정의의 심판자이자 집행자이기도 한 교사는 별다른 제재 조치라는 걸 취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학교에서 어찌지 못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권위마저 흔들리고 있다.

수업에 업무에 학생 상담까지 다 잘해라?

의무교육과정에서 정학이나 퇴학 같은 조치를 없앤 것은 문제 있는 학생을 밖으로 내보내기보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 교사가 책임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에게는 대부분 부모의 어릴 적 양육 과정에 문제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 있다. 이런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면 전문성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지속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과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병행하면서 다른 수업과 업무도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학교의 현실 속에서, 이런 학생들은 결국 ‘교육 대상’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 될 뿐이다. 제재 방법으로 그나마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체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다.

체벌을 통한 훈육이 아닌, 대화와 이해를 통한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면 모든 교사에게

게 학생 상담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대화 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바쁜 현재의 교사 업무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의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큰 사안들도 일어난다. 학교 교사에게 이 모든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심각한 폭력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처벌하는 교정적 정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들을 위해 해당 전문가들이 상담치료를 병행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기관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이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단지 소수의 거친 학생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먹다 남은 음료수 캔이며 빵봉지가 그대로 복도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복도를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쓰레기를 줍는 청소 아주머니가 없다면 학교 모습이 유지되기 힘들 정도다. 교실에 침을 뱉는 행위는 거의 무의식에 가깝다.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친구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으면 그뿐 다른 친구에게 미안하거나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런 행위가 싫은 학생들은 교사가 강력한 권위로 질서를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의 권위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이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규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면화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규범의 내면화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덕목을 되풀이해 암기하는 것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욕구대로만 모든 것이 움직여서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욕구와 참여를 무시하면서 만들어지는 학교 규칙은 학생이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규범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 ‘체벌’이라는 수단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려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학생 참여를 통해 집단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교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생·교사·학부모 모여 토론을

현재 운영되는 몇몇 대안학교의 사례는 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대안학교는 학교 규칙을 비롯해 학교 행사 운영에서도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하고 소속감도 높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공동체에 애정을 갖기 어렵다. 공동체에 애정을 갖게 되면 그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함께 만든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교실이 통제와 군중심리가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토론과 합의의 공동체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모든 학교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에 대해 학생들의 공론을 모아보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학급마다 지금 현재 논의되는 찬반 입장까지 포함해 토론해보게 하고, 그런 뒤 형성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 토론이 형식적인 학교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진정한 토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학생들은 아주 진지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적용될 법을 만드는데 너희가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껏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던 권리와 책임을 쥐보자. 교육청이 교칙의 방향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각 학교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모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 규범을 만든다면, 교사 혹은 행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보다 집단 규범으로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장경주 서울 시흥중 교사·전국사회교사모임 전 회장